

政策資料 90-3

Mc.a. 13

90年代의 女性發展을 위한 政策課題

— 女性政策討論會 結果報告書 —

1990. 6.

政策資料 90-3
90年代의 女性發展을 위한 政策課題

政務長官(第2)室

政務長官(第2)室

90년 자료실		

90年代의 女性發展을 위한 政策課題

— 女性政策討論會 結果報告書 —

이 報告書는 1990년 6월 12일
世宗文化會館 大會議室에서 개최된
세미나의 內容을 整理한 것입니다.

1990. 6.

政務長官 (第2) 室

目 次

- 日 程 2
- 開 會 辭 3
 - 孫 鳳 淑 (韓國女性政治研究所 所長)
- 祝 辭 4
 - 李 季 順 (政務第2長官)
- 第1發表 및 討論 : 90年代의 政治와 女性參與 7
 - 發表 : 韓 相 震 (서울대 教授)
- 第2發表 및 討論 : 女性政策과 公·私領域 51
 - 發表 : 張 必 和 (이화여대 教授)
- 綜合討論 83

시 간	프 로 그 램
제 1 부	9 : 30 - 12 : 30
9:30~10:00	등 록
10:00~10:10	개회사 孫 鳳 淑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10:10~10:30	축 사 李 季 順 (정무제2장관)
10:30~12:30	90년대의 정치와 여성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韓相震 (서울대 교수·사회학) • 사회 : 李範俊 (성신여대 교수·정치학) • 토론 : 廉弘喆 (청와대 정무비서관·정치학) 李慶淑 (숙명여대 교수·정치학) 陳德奎 (이화여대 교수·정치학)
제 2 부	2 : 00 - 5 : 30
2:00~ 4:00	여성정책과 공·사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張必和 (이화여대 교수·여성학) • 사회 : 李東媛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 토론 : 金愛實 (한국외대 교수·경제학) 周准希 (아신대 교수·정치학) 崔日燮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4:00~ 4:15	휴 식
4:15~ 5:30	종 합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孫鳳淑 • 토론 : 李東媛 李範俊 張必和 崔日燮

개 회 사

孫 鳳 淑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예정시간보다 한 10여분 늦어졌습니다. 서울의 교통난을 생각하면 아침 10시부터 이런 대회를 강행하는 것이 다소 무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회의 진행을 맡은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손봉숙입니다. 오늘 저희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정무장관(제2)실과 공동작업으로 「90년대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세미나를 정무장관(제2)실이 단독으로 얼마든지 주최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같은 민간 연구소로 하여금 이런 세미나를 주최케 한데는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해서 여성계에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이었습니다만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민간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내용을 그대로 수렴하여 이를 정책으로 연결시켜 보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학술토론이 흔히 토론과 발표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세미나는 특별한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계순 정무제2장관계서 새로운 정책의지를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종일 이런 학술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이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자리하셔서 좋은 말씀도 들으시고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셔서 오늘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계순 정무제2장관님의 축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축 사

李 季 順 (정무제2장관)

오늘 「90년대의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토론하기 위해 이런 학술모임을 정무장관(제2)실의 후원으로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일로 생각하며 축하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80년대 격변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막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90년대를 여는 역사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80년대의 여성발전을 돌이켜 보면 여성정책이 최초로 국가발전계획의 독자영역으로 채택되어 여성의 지위가 점차 향상되어 가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었으며, 사회적 변화와 발전속에서 여성계도 각 分野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10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특히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확대개편,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 평등법 제정, 모자복지법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잠재력이 국가와 사회발전에 활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저희 정무장관(제2)실이 발족했으며, 그동안 여성들의 정책적 여망을 수렴하여 여성정책을 立案하고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나아가 “남녀공동참여·공동책임사회”의 실현을 위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질서와 화합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에게도 기회와 참여의 문이 넓게 열리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민적 과제와 시대적 요구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의 여성발전은 그동안 다져진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토대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여성들이 보다 폭넓게 사회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90년대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여성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여성의 힘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장관실에서도 금년의 주요 여성정책과제로 우선 여성의 힘을 결집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성행정의 기반을 강화하고, 여성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화합과 전진의 사회기풍을 확립하며,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여성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가도약의 밑거름을 다지는 한편, 90년대 개방과 화해의 시대를 맞이하여 통일을 향한 여성준비자세를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을 이룩하려는 포괄적인 국가정책을 의미합니다.

국가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기본방침”이라고 할 때, 올바른 여성정책이 수립되기 위하여는 먼저 규명되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람직한 사회상태는 무엇을 뜻하며, 정책목표가 추구하는 구심적 가치체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목표는 자유와 평등을 최고이념으로 하는 선진 민주 복지 사회의 건설에 있으며, 여성정책목표의 구심적 가치체계도 실질적 평등과 형평을 기초로 하여 남녀가 사회의 각 분야에 공동참여하고 이에 따른 공동책임을 나누는 “남녀공동참여·공동책임사회”의 실현에 있다고 봅니다.

헌법상의 남녀평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여성정책은 家父長的 인습에서 전래된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자유와 평등, 참여와 공존이라는 인류공동의 옳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실천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깊이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역량을 키우고 그들의 잠재력과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여성이 동반자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성문제는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전통, 사회의식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도의 개혁과 함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뿌리깊은 의식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그 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렇게 여성정책토론회의 자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오늘의 토론이 90년대 여성정책발전에 소중한 기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발표 및 토론〉

90년대의 정치와 여성참여

- 발표 : 韓相震 (서울대 교수 · 사회학)
- 사회 : 李範俊 (성신여대 교수 · 정치학)
- 토론 : 廉弘喆 (청와대 정무비서관 · 정치학)
李慶淑 (숙명여대 교수 · 정치학)
陳德奎 (이화여대 교수 · 정치학)

<사회 : 이범준>

저는 제1주제의 사회를 맡은 성신여대의 이범준입니다. 이 시간에는 「90년대의 정치와 여성참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표자도 남자분이시고 토론자들 가운데도 남자분 두분이 참여해 주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칼자루를 남자분들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여성들이 아무리 우리의 권익을 외쳐보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에 남자분들이 대거 참여해 주셨으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발표해 주실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의 한상진 교수이십니다. 저의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계시는 엄홍철 선생님께서, 전직 대학교수이십니다. 제 곁에 계신 분이 숙명여대 이경숙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제 왼편 끝이 이화여대 진덕규 교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두시간입니다. 발표는 40분 내지 50분이 좋겠습니다. 토론자는 각자 15분씩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여기 계시는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상진 교수님께서 「90년대의 정치와 여성참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 한상진>

오늘 감히 벅찬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 몹시 망설였던 발표였습니다만 간단히 제가 쓴 논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가지 점만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는 90년대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과 더불어서 우리의 정치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이 이 논문이었습니다. 당연한 주제입니다만 제 생각에 이러한 문제의식은 반드시 여성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가 여성참여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성참여 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조금전에 이제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여성이 남성과 더불어서 보다 더 평등하고 대등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적인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과 더불어, 저 자신은 이 글에서 여성의 참여가 남성위주의 정치적 관행을 그대로 놔두고 안으로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다고 하는 종래의 양적인 개념만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질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를 조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여성시각이 한국사회의 정치에, 또는 운동에, 또는 사고방식에 있어서 참된 의미의 어떤 해방적인 관심으로까지 접목되어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여성운동 또는 여성참여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선 이점을 말씀드리고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세가지 위기경향

90년대 한국정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정치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류의 당위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정치제도 사이의 균열이 갈수록 커짐으로써 나타난 심대한 정치적 불신 및 제도전반의 위기가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실진단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치발전의 과제와 방향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논의에 직접 뛰어들기 위한 분석적 개념들의 제시를 뒤로 미룬 채 90년대의 정치를 간략히 전망해 보도록 하겠다.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90년대의 정치는 헌정중단과 같은 큰 이변이 재현되지 않는 한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라는 오래된 부담으로부터는 점차 벗어나겠지만 새로운 위기의 징후들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유는 제도정치를 넘어서는 사회구조의 수준에서 또는 더 심층적인 지식과 이데올로기의 수준에서 정치의 地形이 크게 변하고 있건만 제도정치가 그 뒤에 낙후됨으로써 균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세가지 문제만을 간략히 지적해 보겠다. 첫째는 대표성의 위기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선거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정당이 민주화되지 않거나 법, 제도,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국민대중과 유리된 직업정치인들이 유권자의 표를 놓고 각축을 벌이는 전철이 계속된다면 대표성의 위기는 불가피하게 심화되리라 보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노동자의 권익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그들의 대표는 어디 있으며 농민, 빈민, 청년, 여성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어디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는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국민의 시각안에 대표성의 위기는 이미 징후적으로 드러나 있는 실정이다.

90년대의 정치를 특징짓는 위기의 한 모습은 이처럼 인적구성의 면에서 정치제도의 실제와 사회구조의 변동사이에 격차가 벌어진다는데 있다. 정당이건 국회건 정부건 간에 제도는 대표성이 약한(또는 지나치게 편중된)집단들의 사적인 위계서열로 특징되는데 반해 사회안에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세력, 운동, 가치관이 등장하면서 참여의 욕구가 넓게 확산되었던 것이다. 또는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등 기존의 사회 범주라 하더라도 정치적 욕구, 기대, 권리의식은 크게 향상되었던 것이다. 이런 객관적 추세는 정치의 '사회적' 지형이 현저히 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변화를 정치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제도의 인적구성이 사회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대표성의 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치실체의 빈곤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성의 문제는 결국 누가 누구를 대표하느냐의 형식적인 문제로 귀결되지만 실체에 관한 문제는 정치가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어느정도 충족시키느냐에 관련된다. 여기에는 '절차'의 문제도 있고 '효율성'의 쟁점도 작용하지만 '실질적 정당성'의 문제가 보다 핵심적인 것처럼 보인다. 즉 국민대중이 바라는 새 시대를 향한 희망의 정치를 제도권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심각한 위기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인적구성을 떠나 정치의 실체를 이루는 관행, 상호작용, 로비, 정경유착, 공작정치, 과두제, 법적·제도적 통제, 공권력 사용 등 제도화된 행위규칙들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발전을 이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새로운 정치를 향한 욕구, 갈망, 기대, 감수성은 시민사회안에서 분출하고 있건만 이것이 제도정치의 끈끈한 타성에 부딪쳐 난파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은 90년대의 문제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날 제도정치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정치에 대한 국민대중의 신뢰가 매우 약하고 정치의 '실질적 정당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반영한다.

셋째는 정치의 생명인 합의도출의 기능이 매우 부진하다는 것이다. 정치가 계급간,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균열을 치유하고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한 지침과 합의를 끌어내기는 커녕 반대로 사회적 긴장과 균열을 더욱 넓히는 비생산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존과 화해의 철학이 빈약하다고 할 수도 있다. 일단 힘으로 눌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권위주의의 체질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6공 정부가 산업능력의 지원을 받아 북방정책 등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면서도 대내적으로는 광범위한 사회적 불신과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정치는 민주화의 궤도에 들어섰지만 아직 민주적 게임의 규칙을 정착시키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의 효율성 저하도 문제지만 사회갈등을 생산적으로 해소해 가는 능력의 부진이 순조로운 체제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억압수단에 의존하려는 체질적인 타성과 금권정치에의 유혹이 한국정치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정책의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클 수 없고 정치는 오직 잘 사는 계층을 위한 게임으로 인식될 뿐이다.

90년대의 국내정치가 불투명한 것은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내용이 국민의 기대로부터 유리된 결과 강력한 도전이 제도권 밖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보다 다층적이고 진보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이 90년대에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90년대의 정치를 제도정치로 국한시켜 보는 것은 단견인 것처럼 보인다. 제도정치의 명백한 한계와 취약성이 90년대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재구성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2. 제도정치, 운동정치, 문화정치

그러면 90년대 정치를 어떻게 조망할 것인가? 우선 간략한 분석틀을 제시하면서 여성의 참여를 이에 연관시켜 보겠다.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90년대의 정치를 전망하려면 적어도 세 영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 영역에서 우리는 두가지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앞서 언급했던 제도정치의 영역이다. 넓게 보면 선거제도와 투표가 관심을 끈다.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정치의 핵심은 정당, 국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거대 압력집단 등의 기구들 안에서 또는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택과 배제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다. 통상적 의미의 정치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정치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크게 두가지 시각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누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느냐를 중시한다. 이에 반해 다른 하나는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중시한다. 즉 '누가(who)'보다는 '어떻게(how)'를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누가'의 시각은 여성이 어떤 제도, 기구, 조직들에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 즉 사실적인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관심을 갖는다. 만일 여성이 체계적으로 배제되었거나 '모양 갖추기' 정도로 취급된다면 그 차원에서 쟁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존제도의 작동방식을 그대로 놔둔 채, 다시

말해 보다 '좋은' 제도를 만들려는 의지없이 남성위주의 제도안으로 보다 많은 여성을 참여시키려 한다면, 결과는 소수 여성지도자들의 포섭이나 남성위주 제도적 관행에 동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잘못된 관행들이 제도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누가'의 차원에서 배제된 집단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제도변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여성참여를 생각하는 것이 보다 전진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는 제도권 밖의 '운동정치(movements politics)' 영역을 가리킨다. 운동정치는 제도정치보다 포괄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으로서 시민운동, 사회운동, 변혁운동으로 표출된다. 제도권의 의사수렴 능력이 취약할 때 운동정치는 시민사회안의 쟁점들을 제도정치에 투입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상보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운동정치는 제도권이 관행화된 선택과 배제의 규칙에 의해 아젠다로부터 아예 제외시키거나 주변화시킨 문제들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여기서도 시각은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여성이 시민운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 특히 여성운동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를 중시한다. 다른 하나는 남성위주의 운동정치와 구별되는 여성운동의 속성을 중시한다. 또는 여성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운동정치의 실제 작동방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중시한다. 즉 '누가'의 차원에서 운동정치의 인적구성을 살펴 볼 수 있지만 '어떻게'의 차원에서 여성운동의 차별성을 살펴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도정치와의 상보적인 측면(보기: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차별의 철폐, 탁아소 설치 요구 등)과 도전적인 측면(보기: 여성분리주의, 여성해방운동)을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는 편의상 '문화정치(cultural politics)'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영역은 통상적 의미의 정치는 아니지만 해석활동에 있어 무엇이 사적인 것이고 공적인 것인가, 즉 무엇이 정치적인 것인가를 은밀하게 규정하는 방식 그 자체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란 뜻에서 심층적인 정치의 영역을 보여준다. 문화정치는 지식의 地形, 이데올로

기 地形에서 작동하는 선택과 배제의 효과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사회인식론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

앞서 언급한 두 시각을 여기에 적용하자면 하나는 지식과 이데올로기의 생산에 여성이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를 중시한다. 반면 다른 하나는 문화정치의 실체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중시한다. 즉 남성위주의 욕구, 감각, 상상력 등이 그동안 정치를 지배해 왔다면 이와 다른 어떤 욕구, 감각, 상상력 등이 정치발전을 촉매하는 여성적인 잠재력으로 나올 수 있는가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어떤 영역의 문제를 다루건 간에 두가지 시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될 수 있다. '누가'의 시각은 인적인 배제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남성위주의 코드를 문제시하기 보다는 이것을 일단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그 안에 여성을 되도록 많이 참여시켜 남성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게 하려는 문제의식을 갖는다. 여기에는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고 사회학적으로는 융합(inclusion)모델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어떻게'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남성위주의 당연시된 코드를 의문시하는 특징을 갖는다. 인적인 구성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제도의 실제적 코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의 모색이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식에 육박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각은 급진적 가치관을 반영하며 단순한 융합모델과는 다른 차이(difference)의 모델을 전제한 변증법적 종합을 추구한다.

3. 여성참여의 과제와 방향

우리는 이상에서 90년대 정치의 위기경향들을 살펴보고 여성의 참여가 요구되는 세 영역으로 제도정치, 운동정치, 문화정치를 구분하였다. 또 '누가'의 시각과 '어떻게'의 시각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했다. 그러면 이제 위의 논의를 전제하고 여성참여의 방향과 쟁점을 검토해 보겠다.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제도정치의 한계가 명백해지면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는 과제가 많은 집단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제는 여성참여에 국한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 또 여성이 정치의 집합적 주체로 부상한 상태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변화리듬의 속도를 감안할 때 이미 여성이 90년대 '새로운' 정치의 집합적 행위주체로 부상할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한다. 그렇다면 여성의 잠재력에 의해 정치발전의 길을 폭넓게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거시적 시각에서 문제를 개진해 보겠다.

제도정치에 관하여

가장 논하기 쉬운 것은 여성이 제도정치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독 녹색당의 '지퍼원리'가 말해주듯이 각종 선거에 나서는 정당후보의 반절은 원칙상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은 여성후보에게 투표하자는 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정당원만이 아니라 정당의 주요직책, 국회 상위 등 기구들의 인적구성, 정부각료 및 각 부서의 고위직책 등에 여성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숫적인 면에서 여성유권자가 남성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정치의 핵심은 남성에게 의해 독점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정당성을 얻는다. 여성국회의원, 당직자, 각료, 고위관료 등이 얼마간 있지만 대부분은 전통적인 성역할 분화에서 여성적인 일에 국한되어 있거나 이른바 '모양 갖추기'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의 내실을 기하려면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남성과 여성의 대등한 사회관계를 지향한다. 즉 힘의 관계를 평형화시킴으로써 성에 의한 종래의 특권, 억압,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도정치의 인적구성에서 여성의 참여를 '지퍼원리'에 부합되도록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윤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90년대 정치의 방향을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볼 때 거부하기 힘든 명분을 갖는다. 대표성의 위기를 해소하고 정치의 개혁적 성격을 담보해 내려면 제도정치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있다. 하나의 대답은 여성의 정치의식, 연대감, 정체성 등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선도해가는 유능한 여성 정치지도자들이 각 분야에서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또 정치의 장을 여성에 개방하는 것을 민주화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전체의 의식의 성숙이 요구된다. 다른 하나의 대답은 정당이 민주화되어 사회적 대표성을 증진시키는데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정치'의 압력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90년대 정치의 방향을 올바르게 파악, 여성정치의 잠재력을 민주화의 방향으로 적극 수용하는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런 양면의 변화가 서로 접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지방자치제 선거이다. 따라서 여성참여의 지평을 넓히는데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각 정당에게 여성후보 할당제를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을 내다보는 정당이라면 비례대표제의 방식을 이용해 유능한 여성지도자의 정계진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성의 정계진출이 숫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제도정치의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예컨대 여성국회의원이 늘어나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에 힘을 모은다면 그 자체로서는 물론 발전적이지만, 그것만이라면 '이익집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질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여기서 90년대 정치를 여성참여의 시각에서 조명하는데 전제되는 보다 깊은 문제의식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코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뿔뿔하게 드러낼 수도 없는 제반 관행, 규칙, 타성이 제도정치의 실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유산은 경험적으로 볼 때 남성위주의 제도정치가 만들어놓은 결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런 제도의 실체를 놔두고 그 안에 여성의 참여를 늘리는 것은 발전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성립된다.

제도정치의 실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의 운영

방식이 매우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상하의 수직적 연속관계가 지배적이며 수평적 의사수렴의 장치는 부실하다. 토론은 모양이며 주요결정은 위에서 이루어진다. 보스들의 과두제가 등장하면서 중대한 문제들이 밀실에서 야합과 흥정으로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정치자금을 둘러싼 흑막이 많고 정경유착의 징후들이 농후하다. 깨끗한 정치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경제적 비리가 제도정치에 깊숙히 침투해 있다는 것이다. 행태적으로 보면 '제로 섬'의 게임양상, 권모술수, 공작정치, 야유 등의 몸싸움, 편법과 변칙, 원칙없는 흥정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여야 정치집단들간의 불신과 대립의식이 팽배하고 어떻게든 서로를 깎아내려 흠집을 내려는 심리가 기저에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치발전의 중요한 과제는 이런 제도정치의 오래된 체질을 여하히 청산하면서 보다 깨끗하고 공개적인 정치, 공평하고 정의로운 정치의 새로운 관행을 확립할 것인가 에로 모아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여성의 잠재력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관해 필자는 여성의 특징적인 사고, 감성, 지향, 가치관의 함양과 수용이 남성위주의 제도정치가 오늘날 부딪치고 있는 파탄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정복적이고 군사적이며 자기중심적인 남성의 권위주의 정치와 구별되는 새로운 정치의 잠재력이 여성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90년대의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지도자들은 단순히 소외된 집단의 이익을 증진시키겠다는 수단적 목표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여성의 보다 풍부한 잠재력을 개발·대변함으로써 남성위주 제도정치의 잘못된 체질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목표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간에 의미있는 정치적 연대를 발전시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여성정치윤리현장' 같은 것을 만들어 필요하다면 소속정당을 넘어선 여성지도자들의 공동연합으로 남성위주 정치의 관행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것이 여성 정치의 가능성을 키워가는 길이 될 것이다.

운동정치에 관하여

다음으로는 운동정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운동이 전형적인 운동정치로서 과연 어느 정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여성이 여성운동에만 참여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재야 인권운동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또한 여성이 주도하는 시민운동이 앞으로 더욱 늘어나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소비자보호운동 같은 것은 이미 그렇거니와 자연보호운동, 평화운동, 공동체운동, 여성피난처운동 외에 다양한 형태의 여성의식화운동이 예견된다. 따라서 90년대의 운동정치에 여성의 역할이 증대하리란 점은 예측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말해 운동정치는 제도권에 사회적 쟁점을 투입하는 일을 하고 제도정치와 비리, 부정부패, 권력남용, 파행화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운동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새로운 정치적 욕구, 기대, 감수성을 제도정치에 계속 투입할 것이며, 특히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정치지도자의 자질과 자격에 대해 여성의 관점에서 열린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뭏든 제도권이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여성지도자가 90년대에 배출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흥미로운 점은 종래의 운동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조직방식의 여성운동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남성이 주도해 온 종래의 운동정치는 종종 규모가 전국적으로 크고 방대하며 위계서열이 분명하다. 또 조직방식은 중앙집권적, 관료적이다. 규모를 중시하고 인적동원을 권력의 지표로 삼는다. 때문에 조직위주의 강한 전략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런 조직방식이 운동정치的主류를 이룬 것은 물론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조직화된 현대사회의 관료적 합리성에 상응하는 운동형태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더 이상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90년대의 새로운 물결을 전망함에 있어 서구사회의 '새로운 사회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시민운동이 우리사회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소규모의

자발적 모임들이 다양하게 분산되면서 수평적 연대를 발전시켜 협력하는 모델이 실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조직방식은 집중적이기보다는 분권적이고 민주적이며 중심지도 부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사소통 회로들의 연결망을 통해 전개된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이 90년대에 이런 탈관료적 운동정치 모델로 발전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여성의 잠재력을 보다 풍부하게 살려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관료제로 특징되는 남성위주의 문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조직방식이 여기서 실험되기 때문이다. 분권화의 구조속에서 자발성, 성찰성, 수평적 연대로 이루어지는 운동모델에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사회의 여성운동을 보면 분명해진다.

문화정치에 관하여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정치에 관련된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을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나눈다면, 전자는 여성에 대한 정치제도의 수요가 저조하다는 것으로, 후자는 여성자신의 참여동기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통한다. 문화정치의 영역은 주로 후자에 관련된다. 무엇보다 여성자신의 공급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만 비로소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에서 여성의 역할신장도 튼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정치의 주요과제는 크게 세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지식과 이데올로기의 생산에 여성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이데올로기적 코드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공과 私의 분리, 男과 女의 분리,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의 분리가 서로 접합됨으로써 나타나는 이데올로기 효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남자의 일은 공적인 일이고 공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며 따라서 남성은 정치적이지만, 여자는 가사 등 사적인 일에 종사하고 사적인 것은 비정치적이므로 여성은 비정치적이다'는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관심을 아예

정치로부터 격리시키는 이런 편견은 남성의 정치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서 아동기의 사회화과정에서부터 부모에 의해 주입된다. 따라서 문화정치의 한 과제는 이런 편견을 극복하고 여성의 정치적 관심을 정당화시키는 사회화 프로그램을 개발, 적극 활용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 과제는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의 고유한 미적 체험, 인간관계에의 갈망, 감수성, 윤리의식, 잠재력 등을 정치발전의 새로운 에너지로 발굴, 운동정치와 제도정치에 공급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험안에서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여성의 모든 경험은 정치적이다'는 명제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성중심의 정치체질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려 한다면 여성의 문화적 자원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남성은 자기중심적이지만 여성은 타자를 깊게 의식하며 자연과 인간을 정복하는 것 대신 화해와 공존, 평화를 추구하고 남성보다 더 윤리적이고 인간적이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잠재력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치문화, 정치철학이 형성되게 함으로써 그 힘으로 제도정치를 성숙시켜 가는 길을 적극 뚫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정치의 윤리성과 인간화된 정치의 회복 등 정치의 질적인 발전을 기하려면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의 고유한 정치에너지를 정치발전에 적극 투입시켜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그의 저서 「의사소통행동의 이론」의 결론에서 비판이론의 과제를 재구성하면서 여성운동이야말로 방어적 성격을 넘어선 유일한 '해방적 운동'으로 큰 잠재력을 갖는다고 논파했다. 의미심장한 통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여성운동도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를 새로운 정치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원대한 비전과 안목을 지녀야 할 것이다.

〈사회 : 이범준〉

발표자는 오늘의 정치상황 분석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정치내용이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도권 밖에서 강력한 도전세력이 형성되고 있어서 제도정치의 한계성,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90년대 정치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여문제를 제도정치, 운동정치, 문화정치라는 세가지 틀을 가지고 분석하셨습니다.

또한 여성의 양적인 참여보다는 질적인 참여의 중요성, 다시 말해서 남성위주의 정치체제 속에서 단순히 참여하는 것 뿐 아니라 남성중심의 코드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질적인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한교수는 여성의 잠재력, 정치분야에서의 기여능력을 인정하고 여성의 정치참여의 당위성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까지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토론자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먼저 염홍철 박사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 : 염홍철〉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는데 한상진 교수님은 학계에 계시고 저는 정부서 일합니다만 오늘 한상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논지에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전혀 의의나 반론이 없습니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정치, 운동정치, 문화정치 세영역으로 구분하면서 그 속에서 '누가', '어떻게'라는 틀을 가지고 이러한 시각차이를 균형있게 설명했다는 것은 상당히 훌륭하고 새로운 분석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상진 교수님의 논지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한상진 교수님께서

여성정치참여에 대해서 구조적이고 포괄적이고 당위론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저는 한교수님이 제시하신 분석틀을 근거로 해서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한상진 교수님의 방향흐름과 조금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성단체와 여성계에서 정치참여와 관련지어서 가장 크게 제기하는 문제는 선거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할당제 주장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단체, 여러 개인이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그것은 대체로 두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금년 2월 26일에 여성단체연합에서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제 의석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정치이론적인 용어로는 공천할당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성유권자연맹에서는 지자체 뿐 아니라 국회의원선거까지도 의석의 20%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선할당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당제는 두 단체 또는 우리 여성계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있는 사례입니다. 공천할당제의 사례는 주로 북구라파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벨지움 등에서 보여지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바로 여성단체연합에서 주장한 것과 비슷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후보자 명단 작성시 여성을 일정한 비율로 공천할 것을 당규로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당선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몇나라가 있다고 산발적으로 주장되고 있지만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대만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은 헌법 134조에 "모든 선거에서 여성의원의 당선 정수를 규정하고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국회의원 선거법이나 각 주의 지자체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10%가 여성의원이고 지방의원도 10%를 상회하는 15%~25%까지 됩니다. 이것은 10명 중 1명이 여성의원이라야 하는 것인데 6명을 선출하는 단위의 선거구에서도 여성을 1명

뽑아야 하기 때문에 여성의원 비율이 15~20%나 됩니다.

이와 같이 공천할당제나 당선할당제가 우리 여성계에서만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전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채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부나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당론으로 또는 정부의 입장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당선할당제를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때 국민의사를 묻기 전에 법으로 일정한 비율의 여성에게 할당제를 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나라 헌법전문과 헌법 제11조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여성에게 선거전에 일정한 의원직을 보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성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성별에 따른 피선거권 차등이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차별을 이야기할 때 실질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이 있는데 실질적 성차별은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편견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당제는 남녀가 다르다는, 특히 정치영역에서 남녀가 다르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여성할당제를 주장하면서 하나의 사례로 든 것은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촉진법입니다. Affirmative action, 이것은 여성이라든지 소수인종 또는 장애자들에게 일정한 쿼터를 주는 것으로, 왜 우리가 이것을 채택하지 못하는가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뽑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제도는 임명권자 즉 기관장이나 어떤 위원회 임명권자에게 성차별 또는 인종차별을 철폐하도록 권고하거나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명권자 또는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어느 대학에서 교수를 뽑을 때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에 있어 그러면 안된다는 affirmative action에 따라서 그것을 잘 지키는 대학에는 보조금을 많이 주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명권자

에게 정부가 권고하는 것이지 국민의 의견을 묻기 전에 국민의사의 일부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affirmative action도 우선처리이론이라는 입장에서 역차별이라고 해서 학계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성이 정치적 영역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주어야 한다면 한교수도 부분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만 약자인 농민이나 어민, 근로자에게도 이같은 정치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이 여성에게 많은 공천을 한다든지 또 비례대표제에서 여성에게 상위순위를 배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농·어민 등의 계층의 대표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것을 정당의 정책이나 관행으로 채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규로서 정하는 것은 위헌의 시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82년 11월 19일 프랑스에서는 이것에 위헌판결을 내렸고 1985년 독일에서도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모범인 헌법정신에 따라서 물론 당의 내규로 정한 것이지만 사전에 특정한 성에게 몇%를 공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설이거나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통례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라파에서는 어떻게 채택되고 있는가를 보면, 북구라파의 경우에는 위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북구라파는 남녀평등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공천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여성이 많이 선출되고 여성이 많이 공천되는 것이 법감정에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우선 대만은 전통적으로 여성을 우대하는 전통이 있고 또 교과서적으로 보면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 하는 손문정신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대만의 정치학자와 이야기해 보면 그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당권위주의체제에서 여성에게 일부 토크를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의 여성운동가들과 우리 운동가들은 문제제기의 방법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서는 여성운동가들이 급진적이든가 또는 온건하든가 하는 여러 부류가 있지만 보통 정부가 어떤 제도로서 위로부터 여성문제를 개혁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상진 교수님 논문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외국의 여성운동가들은 여성문제라는 것이 구조적이고 질적인 문제이지 법을 개정해서 여성에게 공천을 많이 하고 토큰을 주는 것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시각에서 바로 대만같은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반해, 우리는 거꾸로 일단 여성이 지금 현재 상당히 정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런 외국 운동가들의 흐름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성할당제가 안된다면 그 대안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었습다. 제가 정부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성이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상진 교수님이 오늘 제기하신 제도정치의 측면에 해당되었습니다.

여성업무를 전담하는 부처(정무제2장관실)를 신설하고 여성장관을 임명한 것도 일단은 여성공직 참여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중앙부처에만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15개 시, 도에 가정복지국을 신설했습니다. 가정복지국이라는 것은 기존기구에 여성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설해서 여성을 전원국장에 임명했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주 획기적인 변화입니다만 1989년 공무원임원 시험령 제2조를 개정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공무원시험에서 남녀성별 구분모집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성은 10%내외 밖에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개정한 이후 작년에는 25%, 금년에는 30%의 여성이 합격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이 3배 내지 4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안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위원회는 전부 남성들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무총리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지시사

항으로 각 부처에 “정부부처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를 최소한도 10%, 그리고 앞으로 20%까지 증가시키라”는 지시가 시달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채택된 후, 여성위원들은 1988년의 5.5% 정도에서 1990년 현재 9%, 10%로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도 특수학교에 여성은 안된다라는 금기를 깨고 들어간 사례도 많이 있고 평민당, 민자당에서는 탁아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탁아가 약 9만에서 10여만까지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는 법이 통과되면 여성참여확대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이 사실상 한국여성에게 있어서 획기적인 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세가지 법이 여성의 권익신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공무원 임용에서 성별구별을 철폐했다는 것이 획기적인 일이고 그보다 더 획기적인 것은 가족법 개정이고 또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배하는 기업체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만의 노력이 아니고 한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정치, 제도정치, 문화정치가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의식을 바꿔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맡고있는 업무 중에서 21세기위원회가 대통령 위원회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많은 얘기를 하는데 21세를 전망하는 학자들이 21세기에 변화된 모습을 전망하는 것으로 첨단과학기술에 관련된 여러가지 변화를 지적하고 있으며 두번째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고, 여성의 권리가 신장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도 제도지만 의식이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의식을 변화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상진 교수님이 적절히 말씀해 주셨듯이 소비자운동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시민문화운동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정치참여를 위한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또한 의회의 의원선거와도 직결됩니다. 즉 우리 고장에서 이런 운동을 한 여성분들이 많을 때 그분이 지자체 의원으로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이 전개되어야 하겠습니까. 여성들이 여러가지 후보후원회를 결성한다든지 타락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해서 지자체, 지방의회에는 여성위원이 남성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얼마든지 논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여성정치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인 의식을 바꾸어야 하겠다는 의도에서 이계순 장관님을 중심으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모든 국·공립 연수기관 교과목에 남녀성 차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여성지위향상 등 여성관련 교과목을 확대시키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고, 또 많은 연수기관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의식이 여성참여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단체나 여성계 인사들의 뒷받침과 노력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두서없이 드리고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 이경숙〉

우선 남자교수님으로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론적으로 잘 정리된 분석틀을 제공해 주신 한교수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90년대의 정치를 조망하고 위기내용을 간추려 주시면서 여성계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세가지 측면에서 질의드리고 코멘트하는 식으로 제 토론을 할까 합니다.

첫째는 90년대 정치를 조망하면서 제도정치, 운동정치, 문화정치의 세부분으로 나누셨는데 저도 정치학도로서 생각해 보면 90년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전망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결국은 통일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거시적으로 전체를 다 다루어 주셨으니까 통일운동이라든가 통합정치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도 다루

어 주셨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는 지금 우리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저조하다든지 또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이론을 몰라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론도 충분히 개발되어 있고 분석틀도 나오고 하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이라든지 행동하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의 측면과 '어떻게'의 측면으로 나누어 행태와 제도적 측면, 그리고 의식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의 측면을 다른 뜻 즉 실제적·구체적인 방안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떻게'로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제도변화도 해야 하고 의식변화도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염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식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반성과 의지를 표명하는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었으나 제도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할 때는 상당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할당제의 부여부터 시작해서 제도자체를 전복시키는 마르크시즘적 견해까지 여러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한교수님께서서는 실질적인 제도변화를 어떤 측면에서 제시해 주실 수 있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상해 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한교수님께서서는 당을 초월해서 또는 조직을 초월해서라도 여성정치윤리헌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성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론으로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정치를 해보신 분들이 여성정치연맹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결국 여성들의 의식과 행동을 가시화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를 논의하면서도 그것을 구체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금 현재 정치에 계신 분들이 과연 당성이 우선이나 여성권익이 우선이나 할 때 여성권익쪽으로 과감하게 나설 분이 몇분이나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흔히 여성세미나나 여성문제에 관한 모임에서 토의하다 나중에 험악한 분위기로 흐지부지하다가 마는 것은 결국 각자 자기 당소속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쟁으로 끝나고 단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조직원으로서의 규범과 여성으로서의 권익 대변에서 오는 상충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늘 뜻은 좋고 원론은 좋아 시작했다가도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해소의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미있게 본 것은 9페이지에서 여성운동이 90년대에 전개될 때 서구여성 운동을 예로 드시면서 탈관료적인 여성정치운동을 예로 들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예시이며 하나의 제안으로서 가치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운동정치라면 제도와는 달라야 하는데 모든 조직체의 맹점 중의 하나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수건 혁신이건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과두제의 병폐를 나타내는 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운동정치도 하다보면 과두제 또는 관료제의 병폐를 그대로 노정시키는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교수님께서 탈관료적인 입장이 되어야만 운동정치의 본질이 순수성을 유지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성은 늘 수가 적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입장이 제대로 표명되지 못하므로 관료정치의 병폐로 인해서 제도권이나 운동정치권이나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여지가 있는 모델을 제시해 주신 것은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한 하나의 좋은 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교수님께서 여성에 대해 장점을 상당히 많이 보고 계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화해와 공존과 평화추구 등은 우리 여성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쪽에서 우리 여성들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여성정치참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론적인 틀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서 첫번째 질문드린 화해와 공존이나 평화가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앞으로의 통합과정과 관련시켜서 대단히 중요한 덕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정치 내지 통일운동의 차원에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 진덕규〉

저도 몇가지만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한상진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자리에 와서 느낀 것은 한상진 교수와 제자리가 바뀌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여자대학에 있습니다만 한상진 교수야말로 여성문제를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여성들이 모인 자리에 가니까 여성을 위한다는 논리의 차원이 아니라, 깊은 애정이나 인간적인 신뢰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 참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한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논리중에서 제도적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양상과 운동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문화정치의 측면을 나누어 본 것이라든가 또는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지향방향에서 여성이 서야 할 문제같은 것 등은 많은 교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가 느끼고 또 배우면서도 한편 이자리에 앉아서 마음으로 조금 갈등을 느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심하게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조금전에 염홍철 박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것으로,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바라볼 때 여성들의 참여를 어떻게 확보해 주고 어떻게 제도화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에게 쿼터를 준다 또는 여성들에게 공천의 일정비율을 준다는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실제로 여성 장래의 발전을 위한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인 제스처로 끝날 것인가에 따라 문제의 성격이 달라지리라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나 의식적인 여건을 보아서는 여성이 정치현실의 제도권속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지난 40여년간 우리 헌정사나 정치사를 보면 행정부의 고위 과장급이상이나 국회의원, 사법부의 판검사 그밖에 고위당직자들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0.02%에 불과함

니다. 이 숫자는 사실 지난 40년동안 별다른 변화없이 그냥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남성우월적 지배상황입니까. 그리고 그런 구조속에서 전체 사회문화의 매카니즘은 여성을 남성우월에 종속시켜 가고 있습니다. TV화면만 켜면 여성은 항상 남성에 종속적이고 사랑받는 여성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을 주는 여성은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의 모든 유행풍조가 여성은 소비하는 자이고 생산하는 자나 창조하는 자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회분위기가 구조화되고 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언제쯤이면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여성을 당선시켜 준다고 할 때 그렇게 당선된 여성중에 전체여성을 위해서, 전 사회통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남성이 보기에 좋았던 여성만 뽑혀지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20여년 넘게 여자대학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젊은 여성들을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언제쯤 되면 이 젊은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신들이 배웠던 모든 가능성과 잠재성을 다 발휘하면서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당당한 한 몫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단계적 측면에서도 바라보아야 할 것 같고 영역의 전문화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이라는 것은 약할 때, 어려울 때는 일단 분리적인 육성의 단계를 거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한 농도의 설탕물과 강한 농도의 설탕물을 섞어 놓았을 때 강한 쪽이 언제나 약한 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므로 일단 약한 쪽에 방벽을 쌓아서 힘을 길러 주는 것, 그 다음에 대등하게 경쟁시켜주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통합되는 세번째 단계를 거치는 그런 단계적인 전략이 여성정책 또는 여성발전에 고려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또 전문영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회가 대단히 전문화되어 있어 이념을 창출하는 영역이 있고, 운동을 실천하는 영역이 있고, 사회통합에 관여하는 영역이 있습

니다. 이 모든 영역을 특정여성에게 전부 다 일임한다는 것은 여성을 너무 영웅주의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념을 창조하는 여성영역이 있고, 실천을 담보하는 여성영역이 있고, 통합에 기여하는 여성영역이 있는 등 이제는 능력의 전문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서로 전문화된 여성의 능력들이 합쳐졌을 때 보다 더 통합적인, 그리고 아까 한상진교수가 말씀하신 일종의 두가지 서로 다른 차이에 의한 변증법적인 통합의 모습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쯤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다른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다고 이야기될 수 있는 많은 여성지도자들, 즉 로자 룩셈부르크 라든가 한나 아렌트, 시몬느 베이유 등과 같은 능력있는 여성지도자가 이땅에 나와서 더 이상 남성들에 의해서 시켜지고 남성들에 의해서 시해되어지는 그런 측면의 여성이 아닌 인격을 위한, 전체를 위한 여성의 일을 맡아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한교수에게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운동정치 측면에서 남성우월적인 지배문화, 남성우월적 정치체제가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운동정치에 참여하는 상당한 폭의 과격성이 여성에 의해서 선정될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선정된 여성의 운동적인 정치참여 양식이 기존체제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장황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사회 : 이범준〉

다음은 한교수님께서 토론자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아는 것이 변변치 않아 대답도 되도록이면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과분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실망하고 환멸을 느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어디서 여느냐 라고 하는 생각의 일환으로서 여성문제를 생각하는 글을 이번에 쓰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여성의 잠재력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좀 과도하게 강조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이 과연 어느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회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지나친 낙관주의는 피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 있지만, 저로서는 현실의 벽을 뚫어가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여성문제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을 듣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상정했던 그런 문제들이 다양한 형태로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우선 염홍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진덕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른바 할당제 문제에 대한 시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 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군요.

저는 할당제 문제가 반드시 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직관에 의하면 할당제 문제는 헌법학적인 문제로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성적인 권력의 독점현상을 배경에 깔고 나오는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위험이나 아니냐 하는 수준의 문제이기 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정치의 대표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실질적인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해 가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있게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한표를 던져 선출한 이상 그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이야기이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 집단들이 인적인 면에서 골고루 대변될 수 있도록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견고하고 실질적인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형식적인 절차는 그럴 듯한데 내용은 항상 많은 층들이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배제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민주주의의 내실을 기하는데 있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힘의 축이 어떻게 조직화되어지고 개발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당제를 통하건 다른 방법을 통하건 간에 여성정치인이 제도권안으로 실사 어느정도 더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방금전에 진덕규 선생님이 제안했던 것 처럼 과연 어떤 여성이 들어갈 것이냐, 남성의 관점에서 조금 더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또 그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간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남성위주의 체질화된 코드안으로 쉽게 동화되거나 포섭되어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은 사실 항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소수의 여성정치지도자들의 능력과 자질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다 더 제도정치의 바깥에서 그것을 항상 감시해주고 여성정치의 어떤 잠재력을 끊임없이 발굴해주고 고양해주고 투입시켜 주는 그런 힘이 — 저는 이것을 운동정치이고 문화정치라고 보는데 — 필요합니다. 그런 힘이 사실상 제도정치 바깥에서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사회적인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즉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조직화가 되어지지 않는 한 그저 몇사람의 여성지도자들이 제도권안에 들어가 보았자 아주 수단적이고(instrumental), 이익집단화되어지는 한계를 넘어서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도정치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제 논지에서든 그것은 하나의 부분으로만 보고 보다 더 큰 힘을 바깥에서 어떻게 조직화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조금전에 이경숙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로 당성이 우선이나 아니면 여성의 권익신장이 우선이나 하는 이분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설사 어떤 여성지도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막상 들어가

놓고 보면 당 위주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을 깨려고 하면 여성의 힘이, 여성의 권리의식과 정치의식이 일정한 방식으로 사회안에서 조직화되어지고 그 자체가 여성지도자들의 행동에 무언의 제도적인 압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견제되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를 뚫어가려고 하는 어떤 압력이 작용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입체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이경숙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것처럼 지금 저의 진단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다분히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숙 선생님께 한가지 이런 것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 자체도 관념적인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잠재력을 개발해 간다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중요한 측면은 identity의 문제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역적인 identity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거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정치가 마음에 안든다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불신이 많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나왔으면 하는 갈증은 큼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성은 갈증이 더 크고 여성은 적다든지 여성은 큰데 남성은 적다든지 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힘은 지금 사회안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준동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새로운 정치를 실천해 갈 수 있는 새로운 identity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적인 identity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인가를 아까 진덕규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비분강개한 투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걸 가지고 비분강개만 할 것이 아니고 과연 여성들에게 있는 정치적인 가능성과 잠재력을 어떻게 발굴시켜 여성적인 identity를 만들고 그 여성적인 identity가 기존 정치적인 관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전해 갈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식인, 언론인, 소위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성정치의 identity를 함양함으로써 인해서 그 identity를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수평적인 연대의 끈으로 삼고 그 힘에 의해서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 실망,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같은 것을 접목시켜 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처럼 흔히 이야기하는 제로섬 모델로 여성문제를 지나치게 밀고 나갈 경우에 사실은 남성들로부터 미증유의 다양한 반격의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아무리 길으로 아니라 해도 모든 관계는 기본적으로 힘과 힘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역적으로 영·호남이라고 할 때도 기본적으로 힘과 힘의 관계입니다. 하물며 제로섬게임으로, '100이 있는데 네가 95를 갖고 내가 5 밖에 못 받았는데 왜 내가 5만 갖느냐 나는 적어도 30은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네가 25를 양보해라'는 식의 모델로만 밀고 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힘의 관계에 있어서 역습이 나오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바로 이 여성적인 identity에 근거하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오늘의 현상에서 우리 모두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직접적인 길이라는 것, 즉 기존의 제로섬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을 향한 어떤 운동이라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많은 남성들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지평을 열어가면서 동시에 여성참여가 추진되어야만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만일 이 차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그냥 직접적으로 수단적인 차원에서만 문제를 풀어간다고 하면 물론 많은 것이 얻어지겠지만 좀 더 큰 획기적인 정치발전의 길을 뚫어가는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잠재력을 너무 좁게, 너무 수단적으로, 너무 근시안적으로 소진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좀전에 통일문제, 통합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도 해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오늘의 논의에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안에서는 제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운동 방향에서 탈관료적 모델에 관해서 이경숙 선생님께서 좋은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성들도 이런 것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가 많아지고 수를 전체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세를

과시함으로써 기존의 모델효과가 금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정말 우리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재조직하느냐 하는 벽찬 과제가 나오는데 사회를 재조직하는 것은 여러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그 원형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의 중요한 부분은 사회운동입니다.

한편 지금까지의 운동과는 달리 서구사회에서 많이 실험되고 있는 운동, 여성운동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시 같은 베를린시 안에 수백개의 여성운동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절대 관료적으로 상호통합되어 있지 않지만 기능적으로 상호연대하는 분권화모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관료화되어지므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해서 이제는 분권화를 통해서 자발성·창의성을 가지면서도 전체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이 관료화 모델을 극복해 가는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가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기존의 통념으로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수가 많지도 않고 그저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성지식인들, 지식인들 또는 문화인들, 운동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인식을 가짐으로써 이러한 추세에 획기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식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부딪치고 있는 관료화된 사회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조직모델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상당히 큰 수평적인 연대를 추구해 가고 좀더 폭넓은 성찰적인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협조해 가는 모델을 의식적으로 추구해 감으로써 새로운 사회조직의 원형을 이 사회에서 탐구해 가는 잠재력이 제 생각에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남성은 본질적으로 정복적이고 관료적이고 유교적이고 명령적입니다. 물론 모든 남성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러한 성질은 사회화를 통해서 길러집니다. 모든 것이 남성중심이기 때문에 여성은 소외되어지고 불가피하게 타자를 의식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반면 남성은 항상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군사문화, 권위주의문화를 우리사회에서 대표적인 남성문화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조금 더 큰 어떤 문명사적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해 가면서 그것을 정치화시키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이때 운동정치 모델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덕규 선생님께서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을 하신 분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평소에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동정치영역에서 여성운동이 보다 더 급진화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하신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다시 진덕규 선생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 진덕규〉

아무래도 토론자는 발표자에게 있어서 일종의 치장품에 불과합니다. 얼마만큼 발표자를 빛나게 해주는가가 토론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토론자가 말을 많이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한가지 한교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교수님은 여성은 우선 여성나름의 identity를 만들어라, 여성다움을 찾아서 여성다움의 삶이랄까 여성다움의 자기정체의식이랄까 하는 것을 찾아라, 그 다음에 두번째로 남성과의 관계에서는 제로섬관계로 들어가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경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함께 서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이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것은 묘하게 남성우월주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여성다운 자기의 identity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남성과 다른 여성이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여성이겠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한박사 생각은 남성들이 갖고 있는 지저분함, 그 정복적인 것을 극복하고 보다 더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여성의 이미지, 여성의 identity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여성을 만들어 남성까지도 감복하게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위한 identity가 아니라 전체 인간을 위한 identity를 여성이 만들어낸다고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제로섬관계에 관해서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지금 현재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 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사회에 있는 가치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수없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직위, 가치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창조되지 않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에 여성이 관여할 수 있고 여성답게 인격을 발휘할 수 있는 것에 조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함께 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은 대립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남성이 다르고 여성이 다르다는 시각을 가지고 여성문제를 보아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남성의 할 일, 여성의 할 일을 구분해 보아서도 안됩니다. 사람마다 어떤 여자는 남자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남자는 여자의 일을 여자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이런 제로섬관계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그리고 여성의 identity도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제도권 정치가 이와 같은 여성들의 의사, 욕구, 참여 또 그 가능성의 폭을 확대하고 많은 것을 봐주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여성정치가 급진화되는 것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그것이 역기능적인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가까운 여성의 잠재력, 능력, 가능성을 어떻게 더 이상 버려둘 수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토론 : 한상진>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 융합모델, 즉 남성위주의 관행을 그대로 놔두고 여성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어서 융합하는 모델보다는 남녀차이, 그 차이를 전제하고 변증법적으로 한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진정으로 여성적인 잠재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키워가는 길이라는 것이 저의 결론인데 그 부분을 진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에 진단하셨듯이, 여성운동이 자칫 잘못하면 급진화될 가능성이 없겠느냐고 할 때 제가 예견하면 일단 사고가치의 면에서 가장 급진화되어 극단적인 분리주의로 가면 그 이상 더 급진적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일이 운동이 계속해서 여성을 배제하느냐, '우리에게 동등한 소리를 나오. 우리가 차지해야 할 정당한 몫을 우리가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급진적 운동이 일어난다고 할 때 지금까지 역사적인 관행으로 보면 항상 그런 의미의 급진적 운동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언제 힘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준 경험이 있느냐는 점에서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동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가면 당장은 많이 얻겠지만 가지고 있는 보다 더 큰 발전적인 잠재력이 좁은 수단적인 목표로 인해서 혹시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토론 : 염홍철>

사실은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것은 오늘의 주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청중석에서도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텐데 그분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논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방문했었던 마가렛 미드는 여성이 정권을 잡으면 세계가 평화로워지고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바로 지금 한상진 교수님이 제기한 그런 얘기를 했다가 여성운동가들에게 호된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는 것이냐, 어떻게 여성이

정권을 잡으면 더 평화적이고 남성이 잡으면 안되느냐 하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여성 운동가로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인용되는 시몬느 보봐르 같은 이는 “여성의 지위는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도개선이 더 중요하나 의식개혁이 더 중요하나 하는 것들에 대해 여성계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성정치참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문제제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 : 이범준〉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참겠습니다. 청중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기 계신 내분 누구에게나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회중토론 : 하영애〉

전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하영애입니다.

한상진 교수님께서 제도, 운동, 문화정치라는 분석틀을 가지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페이지를 보면 여성의 정계진출이 숫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제도정치의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적 발전에 대한 우려 역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 299명 중 여성 의원은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선 숫적향상이 있고 난 다음에 질적향상은 서서히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관지어서 제한된 시간때문에 염홍철 박사님 말씀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 대만의 당선할당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문제인데, 제가 국립대만대학에서 지방자치

선거제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의 여성당선할당제가 만들어진 배경으로 중요한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국회의원들의 투쟁이었습니다. 서명운동을 했는데 송미령씨 — 장개석씨의 부인 —, 오지민씨 등이 1,221명의 연대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성의원들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한사람의 여성 의원이 숨졌습니다. 두번째, 손문씨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당권위주의체제에서 만들어졌지 않느냐 하는 부인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새로운 제도가 탄생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인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중국의 최고 집권자 손문씨의 여성에 대한 의식, 사상 이런 것이 대만과 중국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여성할당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제도가 하나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치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그러한 제도가 이루어질 때 중국의 최고 집권자의 영향에 의해 오늘날까지 이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한국여성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 최고지도자가 여성에 대한 사상, 여성에 대한 의식부터 먼저 깨우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여성이 의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고지위에 계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엄박사님을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중토론 : 진민자〉

청년여성교육원의 진민자라고 합니다. 질문을 할 예정은 아니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 배경은 1973년도에 남녀평등문제를 가지고 이화

여대의 윤후정 박사께서 발제를 하시면서 시작되어 지금과 같은 여성의 인간화 운동이 현재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그 운동을 펴면서 이념의 토착화 작업으로서 한계를 느낀 것이 우리 문화, 우리 생활문화의 배경이 어떤 이념이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나 하는 것이 분명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동양사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상에 있어 잘못된 개념은 역사적으로 동서양에 다 있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에서는 동양사상을 무조건적인 남존여비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그 근본사상이 갖고 있는 개념을 파악하기에 앞서서 역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야말로 여기가 동양문화권이고 또 남녀평등 개념의 토착화라는 당위적인 문제와 이 시대적인 사명,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포괄해야 하지 않는가, 즉 오늘 발제해 주신 입장에서 어떤 하나의 대안, 여성의 정치참여를 말씀해 주셨을 때 사실 문화정치라는 측면에서 이념을 정립시켜 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중토론 : 김선경>

서울여대에 나가는 김선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여성들이 왜 정치참여를 못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가지로 크게 나누면 하나는 여성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자신의 문제가 아마 60%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전에 어느 교수님이 여성들이 지식도 많이 부족하다는 등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여성들사이에도 재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식도 남자들 못지않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번 선거에 여성은 한명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유권자의 반이 여성인데 왜 우리가 진출을 못했느냐,

그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아까 발표자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시민운동, 여성운동, 사회운동 등을 통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다 통틀어서 우리들 자신이 각성하고 큰 목소리로 뭉치면 그 소리가 남성에게, 국회에게, 국민에게 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40%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아무리 정치참여를 하고 싶어도 길이 닫혀 있습니다. 정치참여를 하려면 어디든지 속해야 됩니다. 무소속으로 여성이 혼자 출마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정당에 접근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가 또 문제가 됩니다. 정당은 첫째 문이 닫혀 있고, 둘째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돈인데 여성들이 어떻게 남성들과 겨루어 선거할 때 10억, 20억씩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여성들이 정치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할당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당선할당제에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공천할당제는 있어야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선진국가든지 소수(minority)에 대해서는 쿼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당선할당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그러한 쿼터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첫째는 여성이 어떻게 뭉치는가 하는 문제, 둘째로 소수에 대한 길을 당에든지 국회에든지 열어주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 이범준>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회중토론 : 김덕중〉

세종연구소에 있는 김덕중입니다.

저는 여기 한상진 교수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고, 다음 두가지는 여성정치연구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질문은 지금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문제점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이익 때문인가 또는 차별때문인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흑인과 백인과의 차이인가, 코케이션과 타민족과의 차이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의 차이인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차이로부터 나오는 차이냐 아니면 그밖의 다른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가 여성정치연구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자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싶는데 과연 여자분들이 무엇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를 솔직히 모릅니다. 불이익에는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법적·제도적인 것이 있겠고, 둘째는 관행·관습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가지 어느 것도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자료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중의 하나가 통일 후, 혹은 가까운 5년내지 10년후의 남북한 관계 상황인데 통일된 후에 여성문제가 어떻게 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결국 한박사님께서 여성정치참여에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 : 이범준〉

그럼 먼저 한교수님께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 염교수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토론 : 한상진〉

감사합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에 김덕중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것부터 대답하겠습니다.

김덕중 선생님의 질문에 뚜렷한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로서는 두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현실로서 우리사회안에 있는 불평등구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로 전반적인 의식향상에 따르는 민주적인 제반 권리의식의 향상, 이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성적인 분화로 인하여 상당히 저발전상태에 있었는데 근래에 오면서 권리의식이 상당히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날 이미 제기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제기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이야기를 사실은 좋은 주문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것 한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대체로 '이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제도가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도가 막혀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습니다.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 그러니까 우선 길을 좀 뚫어야 하겠다. 길을 뚫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 할당제이다. 할당제에다 촛점을 맞춘다.' 하는 것은 쉽게 동의할 수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다, 지식이 많다, 이론도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사회에서 어떤 여성적인 시각에서, 대부분의 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여성적인 철학에서, 여성적인 잠재력을 잘 집약시키는 그러한 노선에서, 오늘날 현실정치에 대해 치밀하게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여성적인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좋은 이론이나 작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제도적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하는 진단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당제로 가고 할당제가 어떤 부분에서 탈출구를 열어준다는 점에서는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만, 그러한 비전만 갖고 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동화모델, 즉 일종의 선별적으로 끌어들이 융화시키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문제가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10년을 내다보고 21세기 정도 되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제도적, 수단적 수준에서 길을 뚫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감히 말씀드리면 다 알고 있고 지식이 많다고 하는 표현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성적인 시각에서 현실정치를 뚜렷하게 비판하고 여성의 잠재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체계화된 이론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계몽이 일어나고 여성들이 진정으로 자각하고, 또 여성들만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여성이 보다 더 한차원 높은 수준에서 정치의 지평을 여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이 수단적이고 제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는 여성운동, 여성참여모델을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노력, 지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저변을 밑에서부터 확대시켜가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성이 이익집단화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는 좀 늘어나더라도 정치는 별 진전이 없습니다.

〈토론 : 염홍철〉

이 자리에서 제가 대만의 예를 들었는데, 바로 대만에서 지자체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하박사님이 계신 줄 모르고 제가 틀리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헌법위헌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김상철 변호사-우리나라 법이론 관계 잡지를 발행하는 분이 계셔서, 그 얘기도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한상진 교수님이 쿼터제 채택이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분은 쿼터제가 위헌이면 헌법조항을 고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원론인 평등원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엄격히 보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차선의 제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서 농민이 80%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민을 배출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있을지라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평등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제도를 개혁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박사님께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고 했는데 사실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 제한되어야 마땅합니다. 민주화되고 다원화되면서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과 쿼터제가 부합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결단으로 쿼터제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많은 토론을 거쳐 결과적으로 집권당의 대표의 선택정도로 밖에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박사의 말씀은 상징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서울여대 김교수의 말에는 동의하는데 당선할당제에는 저도 반대합니다. 의석할당제 — 공천할당제에서 여성을 당규로 몇 퍼센트 해야 한다는데는 반대하지만 여성의 공천을 최소한 몇 퍼센트 해야 된다는 관행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사실상 역대집권당에서는 여성에게 쿼터를 10% 이상 줬습니다. 3당통합 이전 민정당에서는 전국구 의석에 여성을 10%공천했고, 모든 여당에서는 사실상 여성에게 10%이상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성정치참여의 궁극적인 제도적 수단이었나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이범준〉

23~24년전 제가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다만 오늘과

20여년 전과 다른 점은 용어가 좀더 세련되었다 뿐이지 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금은 발전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논의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슬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한가지 좀 놀란 것은 아까 한 분이 여성이 법적, 관습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데,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점이고, 또 하나는 한박사께서 하신 양적인 참여 보다는 질적인 참여를 중시해야 된다, 그리고 제로섬게임을 하면 안된다는 말씀은 우리 여성에게 양적인 기회는 주어졌으므로 이제는 질적인 참여를 할 단계로 혹시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즉 우리 여성의 지위가 대단히 향상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우선 양적인 참여의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도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자체가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위공무원 자리만 가지고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제로섬게임 즉 남성들을 압도하기 위한 제로섬게임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성이 여성을 압도하고 있는 오늘의 이 제로섬게임의 폭을 좁히려는 것입니다. Non zero-sum까지 가려면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러한 현실감각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여성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의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익집단으로서의 여성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여성으로서의 반성도 해야겠지만 남성의 기득권 고수, 그 걸림돌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앞으로 20년이나 더 이같은 모임을 되풀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발표 및 토론〉

여성정책과 공·사영역

- 발표 : 張必和 (이화여대 교수·여성학)
- 사회 : 李東媛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 토론 : 金愛實 (한국외국어대 교수·경제학)
周准希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정치학)
崔日燮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